

# '휴게실 설치 의무화, 있으나마나 법 될라' 산안법 시행령 규탄 행동 계속

조연주 기자 | 승인 2022.06.08 19:33

"개정법을 하위법령으로 무력화하는 윤 정부 신호탄"  
노동시민사회단체 1만인 규탄서명 노동부에 전달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될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예고돼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공동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집중 공동행동이 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함 '시행령 전면적용'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1만여 명의 목소리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련한 1호 시행령이나 다름없는 휴게실 설치 하위법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개정법을 하위법령으로 무력화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는 앞선 가이드라인보다도 후퇴한 안이며, 특히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설현장, 고열현장 제조업, 청소, 시설관리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안이라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목소리가 담긴 1만여 명의 서명서를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청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 김준 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개정에 따른 내용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하청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도 원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휴게시설 설치 대상, 관리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했는데, 하위규정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사실상 개정 취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20억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이다. 이중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전체사업장 가운데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에 6%에 불과하고, 전체노동자 절반가량이 적용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또한 휴게실 설치 관리기준은 휴게실 최소면적 기준만 제시, 1인당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노사 자율로 설치 개소를 정하게 되어 있어, 수백 수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 휴게실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법 위반으로 강제할 수 없다. 성별에 따른 구분 의무나, 작업장소와의 거리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더해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당수 경우 시행령 기준을 한참 웃도는 휴게실이 설치돼있을 것으로 본다면, 시행령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공장에는 이미 웬만한대로 휴게 공간이 다 마련돼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 특히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 작업 공간이 작업하는 현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것을 개선하자고 이 법을 만들었지 않았나”라고 되물으며 “그럼 이 법의 적용이 유예하거나 제외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찾아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역할과 임무를 하는 것이 정부다”라고 규탄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건설사들 열악한 건설사들에 대한 편의를 봐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장에서 더욱 더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입법예고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너무 미비하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의문만 든다”며 “언제까지 이동 노동자는 차별을 받아야 하나. 고용형태의 차별, 임금의 차별 뿐 아니라 복지후생의 차별을 통해 이동 노동자의 휴게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우 수십 개의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고층 빌딩이 숙처럼 쌓여 이루어지고 첨단지 속의 작은 사업장들이 다닥다닥 벌집처럼 가득 차 있는데, 이 시행령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이곳은 여전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복지 혜택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 등 공동행동은 6월 내 공단 및 작은 사업장 휴게실 설치 실태조사 발표 및 국회 토론회 개최와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및 집단고발, 지자체의 휴게실 설치 지원 의제화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본부장 © 김준 기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본부장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김준 기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준 기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 김준 기자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